

민주 “尹 정부, 노동탄압... 청문회·장외투쟁 검토”

민주당·을지로위 등 기자회견
“건설노조 압수수색...1200명 소환
반인권적 노동·폭력진압 역대급”
6월 임시 국회서 청문회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양대 노총과의 장외투쟁 연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해 노동탄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태스크포스(TF) 등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과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계기로 노동 탄압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노동 관련 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험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회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 건설노동자탄압 TF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총 17곳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노동자와 노조 간부, 조합원 등 총 1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1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14명은 기각됐다.

진 단장은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

된다”고 설명했다. 진 단장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 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며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탄압에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양대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도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전 금지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금지통고했는데 집회 했더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라며 “실제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공공 안전 질서에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미신고 집회도 똑같다. 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즉시 공권력 발동이 안 되냐”라는 말은 전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공권력 행사하라고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낙연 “대한민국 생존·국민 위해 할 바 하겠다”

美 떠나 독일서 강연... 24일 귀국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해오다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한다.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들겠다”

며 “귀국은 24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해, 그 결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북한 핵무장과 미·중 신냉전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8회의 강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길도 모르고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밥 한끼, 술 한잔 함께 했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혁신위에 ‘전권 위임’ 가닥

위원장에 외부 인사 영입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혁신기구를 ‘전권위임’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혁신기구에 당 색인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고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달 중순께 혁신기구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선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기

구를 구성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장 인선과 기구의 역할, 권한 범위 등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나왔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외부 인사를 통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지도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등의 주장이 나와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지지부진한 당 지지를 등 위기가감이 고조되자 비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314억 적발”

내년도 보조금 5000억 이상 감축

황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

이와 형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일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형세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황령 리베이트 등 심각한 내용은 고발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행 30% 수준) 감축한

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을 윤석열 정부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8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1차 발표에 이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1차 발표에서 밝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으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의 ‘혁신 재창당’ 논의... “24일 기본 방향 결정”

정의당은 지난 3일 전국위원·지역위원장 합동 토론회를 열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와 혁신 재창당의 기본 방향을 정한 뒤 9월 당 대회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은 지난 1년의 윤석열 정부를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했다”며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해 구시대 유물들을 다 불러와서 가혹한 탄압

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위험천만한 진압 시도를 자행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생명 보호보다는 정권의 지지율이 더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때”라고 우려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던 정부는 되려 양극관립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안들에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있다”며 “반면 재벌이나 부자를 위한 감세나 세액공제

등 친부자 정책은 선제적으로,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결국 비어가는 나라 공간은 서민의 등골을 빼어 채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의 혁신재창당은 오래된 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다당제 정치연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개혁과 노동, 여성, 청년, 기후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재창당은 세력의 재편과 확대의 과정”이라며 “자강을 기초로 노동, 녹색, 그리고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